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2, pp.239-246, May 31,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239

JCCT 2021-5-27

통일 후 북한 주민 대상 경제금융 교육에 관한 연구: 행태경제학 관점을 중심으로

Study on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for the North Koreans after 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conomics

손정국*, 김영민**

Jeong-Kook Son, Young-Min Kim

요 약 통일은 북한이 유지했던 계획경제 체계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은 ① 금융 전반(금융내역 기록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등) ② 대출(개인 신용 관리,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등) ③ 금융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복리와 단리의 차이,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투자위험 유형, 분산투자의 중요성,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등)이다. 다만, 각 내용의 깊이와 넓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한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다음 구체적인 금융의사결정은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와 상의(자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소한의 경제·금융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직관적인 내용으로 국한하고 의사결정은 IFA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 기본 금융 교육 +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결합 모형은 통일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통일, 북한 주민, 경제금융 교육, 행태경제학, 독립투자자문(IFA)

Abstract Unification means the change of the economic system from 'Planned Economy' of the North Korea to 'Market Economy' of the South Korea. Therefore, it may cause confusions and difficulties for North Koreans who have been under planned economy for ages. So, we need to take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conomics for the effective education. First of all, it is about overall finance, which contains the record of financial transactions, effect of inflation, investors' bounded rationality, and choice difficulty of financial products. Second, it is about borrowings, which includes the credit management, interest rate of differenc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it is about investment on financial products, which includes the effect of cost on returns, difference between compound interest and simple interest, trade-off between expected return and risk, market and non-market risks, the importance of diversification, and passive & aggressive investments.

Key words : unification, North Koreans,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behavioral economics, independent financial advise (IFA)

*정회원,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강사(제1저자)
**정회원,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조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3월 17일, 수정완료일: 2021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30일

Received: March 17, 2021 / Revised: April 10, 2021
Accepted: April 30, 2021
*Corresponding Author: ymkim1@kangwon.ac.kr
Assistant Professor, Dept. of Regional Econom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Ⅰ. 서 론

2018년 남과 북의 평양공동선언 이후 동해북부선 복원 사업이 재개되는 등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은 단순히 남북의 영토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유지되던 계획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남한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경제체제를 거의 정반대의 경제체제로 바꾸어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계획 경제체제와 달리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각자 경제생활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신속히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금융 교육이 요구된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은 철저하게 실용을 목표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아울러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이 시장경제 체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와도 연결된다. 둘째,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하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금융지식이 생존에 직결된다. 셋째,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 특히, 금융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져 과거에 비해 활용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은 금융지식의 함양보다는 원론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내용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런 전제는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타당성이 높다.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사람은 의사결정시 대개의 경우 '단순한 휴리스틱'(simple heuristic)을 사용하며, 이러한 휴리스틱은 행태적 편향(behavioral biases)를 동반한다.[1] 예를 들어, 더 싸고 질 좋은 가게가 집 바로 옆에 새로 생긴다고 해도 사람들은 익숙한 가게에 식료품을 사러가는 경향이 있다[1]. 또한 아무리 정보가 충분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다. 특히 불확실성하에서 미래 가격 등을 예측해야 하는 금융 거래에서는 이러한 행태적 편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편향에 의해 어느 정도 일정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행동'보다 '행태경제학'으로 기술한다.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 교육은 무엇보다 활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행태적 편향을 감안하여 교육 내용을 검토하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축이나 대출 등을 위해 금융거래를 하며, 대출시 금융회사에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한다. 또한 여윳돈이 있으면 수익률(이자율)이 확정된 저축도 하지만 최근처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수익률이 불확실한 금융투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이에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경제금융 교육을 금융 전반, 대출, 금융투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금융 전반 관련해서는 금융내역 기록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등 ② 대출 관련해서는 개인 신용 관리,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등 ③ 금융투자 관련해서는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복리와 단리의 차이,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투자위험 유형, 분산투자의 중요성,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등을 선정하였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직관적·기본적 경제금융교육을 받고 금융투자를 실제로 수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구체적 금융의사결정은 독립투자자문업자(IFA)와 상의(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교육 내용의 깊이와 범위를 최소한으로 국한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IFA를 활용하여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임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직관적 기본 경제금융 교육 +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결합' 모형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북한의 금융 제도 및 거래 현황, 탈북민 대상의 교육 현황 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내용 선정의 전제조건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경제금융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5장에서는 논의 내용을 요약한 후 결론을 제시한다.

Ⅱ. 북한주민의 금융거래 현황 및 탈북민 대상의 교육

1. 북한의 금융제도 및 거래현황

북한은 1976년 상업은행을 조선중앙은행으로 통합하면서 단일은행제도를 갖추었다. 즉, 자본주의체제의 '이

원적 은행제도'와 달리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고유 기능 외에도 기업·개인 대상 등의 금융업도 맡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기능을 모두 담당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계획경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가기관을 통제하였던 것이다[2]. 또한, 북한에서는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만을 금융에 포함하면서 기관, 기업소(기업) 또는 개인들 간 자금거래를 제도적으로 금지하였다. 즉, 기관, 기업소(기업)만이 대출이 가능하였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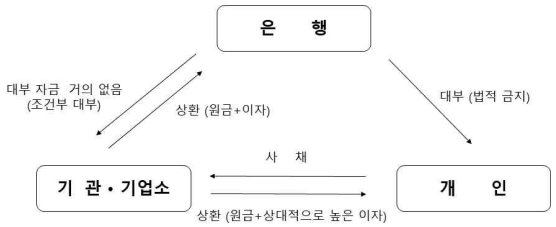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금융제도
Figure 1. Financial System in North Korea[4]

1990년대 들어 연이은 자연재해 및 식량부족 등으로 북한의 배급체계가 붕괴 혹은 이완되면서 국영기업들은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가계도 소비에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비공식금융 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에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이 확산되고 개인 영업 행위도 증가하여 자본을 축적한 개인이 크게 늘어나 일반 주민을 상대로 장사 밑천 등을 빌려주는 '돈주'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형성된 시장(장마당)은 2015년 현재 약 75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물품 거래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5].

북한은 비공식금융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에 상업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예금에 대한 비밀 및 예금상환을 보장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현재 평양에서는 30~40개의 상업은행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비밀보장을 전제로 개인 대상의 수시입출식 예금, 환전업무(북한 원화를 미국 달러화, 중국 인민폐, 유로화 등으로 환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금융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은행 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에 불과하여 시장 및 금융거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7].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공식금융 활동을 실제로 경험한 가구는 상거래신용 11.6%, 금전대차 17.8%, 계(契) 1.2%로 나타났고,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해 본 가구의 비중은 27.8%에 불과하였다. 특히 내륙군 지역에는 농촌의 곡물고리대를 제외하면 비공식금융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

북한의 금융 수준은 체제전환 이전 구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구동독의 경우 통독 직전까지 3,000여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동독주민 예금의 80% 이상을 취급하면서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구소련 체제에서도 국가의 공식적인 장기대출 중 신용조합(trade union credit unions)을 통한 가계대출의 비중이 약 16~27%를 차지하였다[8]. 북한의 공식 및 비공식 금융의 상대적 낙후는 통일 후 북한주민의 경제체제 변화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2.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 현황

계획 경제체제의 북한에서는 보통교육단계(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등교육단계(대학, 전문대학)에서도 경제 전공자나 관련부서에 한해 경제금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정은 거의 개설되지 않는다[9].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새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초기 12주간 '탈북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머무르면서 기초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탈북민의 이해 제고를 위하여 '우리 사회 이해 교육' 과정에서 민주시민 프로그램,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표 1>과 같이 경제금융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통일부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2010년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2018년에는 탈북민들이 겪었던 금융생활 애로점들을 반영하여 은행·신용카드·보험의 이용,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금융투자상품 이해와 주택 관련 금융상품 이용 등을 포함한 '똘똘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표 1. 하나원의 경제금융 및 생활법률 교육 강화 내용[10]
Table 1 Curriculum of Korea Hana Foundation

교육 주제	교과목	시간	내용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시장경제 이해	2	시장경제 원리 및 장단점
	생활금융 및 생활경제	2	소득, 저축, 통장개설, 금융기관 이용
		2	합리적인 소비 활동, 가계운영, 경제정보 활용
	보험 및 금융상품 이해 및 사기 예방	6	보험제도 안내, 다양한 금융상품 소개(부정적 요소 포함)
			보험, 금융사기(다단계 포함) 예방을 위한 사례 교육
사회 이해 프로그램	생활법률	4	준법의식 제고 및 범죄 예방 사례교육(금융범죄, 마약, 성매매 포함)
	법률피해 구제 사례	4	권리구제를 위한 실무사례, 상담 위주

이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2015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기존 주민에 비해 절반 수준(53.9%)이다. 탈북민의 국내 거주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이들의 금융지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며, 국내 입국 이후의 금융교육이 금융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을 발견되었다[11]. 또한 예금자보호제도, 신용카드 연체정보 등록제도, 생명보험 가입 시기 등 일반 소비자가 쉽거나 보통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는 금융지식에 대해서도 탈북민은 어렵게 느끼고 있다고 지적되었다[12]. 탈북민이 연체 및 채무불이행 건수가 높았으며 신용거래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체 건수는 감소하나 장기연체인 채무불이행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금융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신용관리 능력이 향상되기는 하지만 채무 상환능력이 취약하여 개인 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에 따라 탈북민들이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노후준비 지식 및 정보의 부족을 겪고 있으며 관련 교육의 효과도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14].

III.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내용 선정의 전제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은 철저하게 실용을 목표로 설계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이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와 연결된다. 통일 후에는 북한 주민들도 국민연금에 편입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은 상당한 재정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만 65세이상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8년 기준 500만명을 넘었으며, 11.9조원의 지출규모에 달한다[15].

현재 남한의 고령인구(65세 이상)은 14.9%, 북한은 9.3%이며, 2040년에는 각각 33.9%, 18.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16].

둘째, 재정문제가 아니라도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융지식이 생존에 직결된다. 심지어 우리 국민들도 국민연금이나 노후연금으로 노후를 충분하게 대비할 수는 없으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 충분한 대비가 없어 통일 후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당한 불안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 금융지식이 경제 및 금융 생활에서 실제 행동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금융지식을 이미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역량강화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17].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2013. 9), 투자자교육 강화(2014. 2), 금융역량 제고방안(2015. 10),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2017. 1),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2020. 5) 등 거의 매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OECD/INFE(2016)가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으로 구분하여 전 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금융지식이 2위를 차지하였으나 금융태도 및 금융행동은 각각 17위, 13위를 기록하여 금융지식이 금융 태도 및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금융이해력'이란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지식의 제고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장기지향(towards the long-term) 태도(금융태도)를 가지고 금융지식에 기반하여 투자판단을 하는 것(금융행동)을 말한다[17].

북한 주민의 경우 계획경제 체제 하에 태어나 살아왔기 때문에 시장경제 및 이에 기반한 금융생활에 더욱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들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노후 자산을 스스로 마련하고 투자 손익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금융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보이기도 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에 이들이 필요한 금융지식은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 훨씬 많을 것이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에서 당장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시장경제에 적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딜레마 하에서 개인적 가용시간은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 금융지식 습득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적을 것이다.

넷째, 지금의 금융투자시장은 과거에 비해 활용하기가 크게 어려워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금융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주식투자보다는 일반 금융소비자의 금융은 주로 은행거래였으며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960년대에는 20%가 넘었고 1970년대에도 10%를 훨씬 넘었다. 정부가 은행 금리를 사실상 통제하고 은행이 망한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한 시대였고, 정기예금 금리가 워낙 높으니 다른 금융상품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어 지인이 근무하거나 집 근처 은행 중에서 다니기 편한 곳을 찾는 게 의사결정의 대부분이었다. 일반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도 그리 종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고, 금융투자상품의 수는 엄청나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습득하기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로, 펀드가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5월이며 1973년에 펀드가 두 개 추가되었다. 그러나, 2020년 10월 31일 현재 일반투자자가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의 수는 4,000개가 넘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은 금융교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의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이나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이 나올 때마다 교육을 시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온 투자자교육이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결론으로 보인다[18].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합리성이 제한적이고 행태적 편향이 있어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설령 완전하게 이해했더라도 금융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 중점을 두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이다. 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은 기존 교육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금융지식의 함양보다는 원론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내용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이다.

IV.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내용

북한 주민들의 특수성 및 행태적 편향 그리고 외국기관들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행태적 모형을 감안해서 선정한 교육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19].

표 2. 직관적인 기본 경제금융 교육 내용
Table 2. Instinct and Basic Contents for Financial Education

구 분	교육 내용
금융 전반	- 금융내역 기록하기 - 인플레이션의 영향 -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 자신에게 맞는 금융전문가 선택 방법
대출	- 개인 신용 관리 -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금융 투자	-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복리와 단리의 차이 -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 투자위험 유형 - 분산투자의 중요성 -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사람들 대부분은 살아가는 동안에 저축 등 금융을 이용하며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 주택 구입 등으로 대출을 받는다. 또한 여윳돈이 있으면 저축도 하지만 수익이 불확실한 금융투자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제금융 교육을 금융전반, 대출, 금융투자 등으로 크게 구분

하였고, 저축과 투자라는 금융상품의 유형 외에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첫째, 금융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포함하였다.

(가) 앞에서 설명한 영국의 MaPS는 금융역량의 가장 기본으로 자신의 수입, 지출(소비), 저축, 대출 등의 '기록'을 꼽고 있다. 금융기록이 있으면 본인의 재무상태를 분석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다) 및 (라)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 금융의사결정은 IFA를 이용할지라도 금융내역을 기록하여 자신의 소비수준을 파악하고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소비, 대출 등을 지양해야 한다. 최근 다양한 앱이 등장해서 금융기록은 북한 주민들이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나) 현대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폐 가치를 하락시킨다. 따라서 소비하고 남은 소득은 집에 보관하고 있기보다는 금융기관에 맡김으로서 이자 등을 통해 화폐가치 하락을 보상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 금융상품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투자지역도 해외 여러 나라로 확대되고 투자방법도 다양해져서 시간을 들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일반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의 수만 해도 4,000개가 현재 넘어, 펀드 하나에 10분씩만 할애한다고 해도 다 보려면 20일 이상 걸린다. 더욱이, 투자상품은 공모펀드만이 아니고 사모펀드, ELS, ELD 등 수없이 많다. 즉,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주관적 요인과 복잡다기한 금융상품이라는 객관적 요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습득하고 분석하기가 어렵다.

(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태경제학의 주장처럼 사람의 합리성이 제한적이라면 금융거래 시에는 각자에게 맞는(유리한) 금융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법률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간다.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식 수준의 지식으로는 병을 치료하거나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질병 또는 분쟁에 딱 맞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비용을 아끼겠다고 자신의 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법률분쟁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구글링하거나 네이버를 뒤지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다. 의료지식이나 법률지식은 자동차 운전이나 외국어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질병이나 법률분쟁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융투자를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금융전문가인 IFA를 이용한 것이 낫다.

둘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시 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마) 북한과 달리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개인의 신용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출여부, 대출한도,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어 금융거래 및 일반 상거래의 다양한 혜택 및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낮으면 제1금융권보다는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대부업)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셋째, 여윳돈은 수익률(이자율)이 확정된 은행에 저축할 수도 있으나 수익률이 불확실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에 관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포함하였다.

(바) 비용이 투자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수익률이라도 비용에 따라 실질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이자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기대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비용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신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높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 금융상품의 수익률(또는 이자율) 계산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가장 위대한 수학의 발견'이라고 하였다.

(아) 투자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바라는 행위이다. 투자는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활동이다. 기대수익이 높다는 것은 투자위험이 높다는 것으로, 투자위험이 낮으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음을 교육하여야 한다.

(자) 금융투자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과 특정 기업만이 직면하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차) 투자위험(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종목(산업)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다. 분산투자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낮춤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카) 투자방법은 적극적(active) 투자와 소극적(passive) 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극적 투자는 개별 주식 종목이 아닌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분산투자의 효과 등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폭과 깊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흔하며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인식을 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인플레이션 계산방법 등 여타의 내용은 핵심 내용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의 목적은 시장경제에서는 스스로 경제금융생활을 책임지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되, 독립금융자문업자(IFA) 등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의 여지가 적은 금융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금융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으며, 이들은 투자자들과 이해상충이 없도록 금융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V. 결 론

통일은 남한과 북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면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이 국민연금에 편입되면 재정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다. 독일도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경제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연금 통합 과정에서 서독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연금개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시장경제 및 금융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 내용을 확립하여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야 사회 혼란을 예방하고 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금융수준은 동독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금융을 이용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가운데 시장경제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하기에 금융교육을 위해 할애할 시간도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교육 내용은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다. 더욱이,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결정 시 행태적 편향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높은 금융거래에서는 이러한 편향이 더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다. 복잡한 현대금융시장에서 개인이 모든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기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제한적 합리성'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한다면,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게 현대 금융시장의 한계 또는 사람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직관적 내용에 집중하여 기본적 금융지식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은 금융경험이 거의 없는 북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깊이와 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무엇보다 금융내역은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화폐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복잡다기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시의 행태적 편향 등 사람이 제한적 합리성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전문가 선택 방법을 알아야 한다.

2. 많은 사람들이 주택구입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므로 개인 신용 관리의 중요성 및 금융권별로 대출금리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여윳돈으로 수익률(이자율)이 확정적인 저축을 할 수도 있지만 수익률이 불확실한 금융투자도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동일한 수익률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교육하고, 복리와 단리에 따라서 수익률(이자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교육한다.

4. 기대수익이 높다는 것은 위험이 높다는 양(+)의 상관관계를 배우고,

5. 투자위험에는 체계적 위험 및 비체계적 위험이 있으며, 분산투자를 통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 있음을 알고,

6. 주식시장 지수 등에 투자하는 소극적 투자 방식을 통해 분산투자 효과 등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여야 한다.

7.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후에는 구체적 금융의사결정은 독립투자자문업자(IFA)와 상의하여(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여야 한다. 독립투자자문업자가 고객의 이익을 중시하게 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설명도 함께 교육하여서 독립투자자문업자(IFA)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직관적·기본적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구체적인 금융행동은 독립투자자문업자(IFA)를 활용하는

'직관적·기본적 경제금융 교육+독립투자자문업자(IFA)' 결합 모형은 금융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체제가 다른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필요한 경제금융교육 내용을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처음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직관적·기본적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적절한 교육내용 선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통일 전이라도 탈북민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교육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ferences

[1] S. B. Kim, Behavioral Economics, Gi-Pil Media, 2013.

[2] Ministry of Unification, Study on Change in North Korea, 2018, Seoul.

[3] E.C. Lim,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Patterns, Implications and Tasks",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No. 5, 2015, 205-242.

[4] Y. H. Kim, Post office and financial service in N. Korea, KDI, 2015.

[5] M. Hong, K.S. Oh, E.Y Jung, K.B.Han, M.S.Yang, M.S. Cha, Y.S.Jeon, B.K. Kim, H.J. Park, E.J. Choi, Study on the Chanage in N.Korea: Marketization, Ministry of Unification, 2018, Seoul.

[6] H.S. Park, B.Y. Lee, N.Korean Finance and Implication of Vietnamese Financial Reform, Korea Institute of Finance, 2019, Seoul.

[7] B.Y. Kim, M.S. Yang, Market and Government in the North Korean Economy, SNU, 2012.

[8] J.Y. Lee, S.M. Mun, "Study of Informal Finance in North Korea with Analysis and Evaluation", Bank of Korea WP 2020-16.

[9] E. C. Jung, Financial Life Settlement of N. Korean Defectors: Problems and Solutions, KDI North Korean Economic Review, March, 2016.

[10] Ministry of Unification, South-North News, 2015.

[11] M. Kim, S. Choi, J. Lee, "Economic System and Financial Literacy: Evidence from North Korean Refugees," Emerging Market Finance and Trade 53, 2505-2527.2017.

[12] J.Y. Son, J. Y.Park, "A Study on Financial Knowledge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North Korean Defectors," Financial Planning Review 11(4), 2018.11, 55-79.

[13] S.H. Jung, B.K Min, J.W Kim, "An Analysis of the Credit Behavior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Bank of Korea WP 2018-11, 2018.

[14] H. J. Kim, J. K. Kim, "A Case Study on the Deterring Experiences of Middle Aged North Korean Defectors for Financial Preparedness for Old Age",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 11, No.2, 261-304, 2019.

[15]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Estimation of Basic Pension for 2018~2027. Seoul.

[16] Statistics Korea, Population Prediction for the World and Korea, Sept., 2, 2019.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377228&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17] OECD, Advancing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2015.

[18] J. K. Son, Y. M. Kim, J. Yoo, "Studies of the Effects of Investor Education on Financial Capability", Journal of Money & Finance, 31(4), 103-131.

[19]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Feedback from the Financial Education Field, 2012, Washington D.C.

※ 2020년도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